

KMI

북한해양수산물리뷰

2025년
12월호

발간년월 2025년 12월 31일

발행인 조정희 원장

총괄 윤인주 해양안보전략연구실장

감수 한덕훈 글로벌전략연구본부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자료문의 글로벌전략연구본부 해양안보전략연구실 정다현 연구원

TEL +82-51-797-4747

FAX +82-51-797-4759

www.kmi.re.kr

목 차

기획 칼럼

3

2025년 북한 해양수산 분야 평가와 2026년 전망

진희권(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연수연구원)

동향 분석

11

2025년 북한 수산법 개정 분석과 시사점

윤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북한 어촌문화주택 건설 동향

이승지(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북한 알기

26

북한의 간석지 서사에 투영된 시대의 얼굴들

이지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평원의 끝에서 만난 바다: 신포시의 역설

강재연(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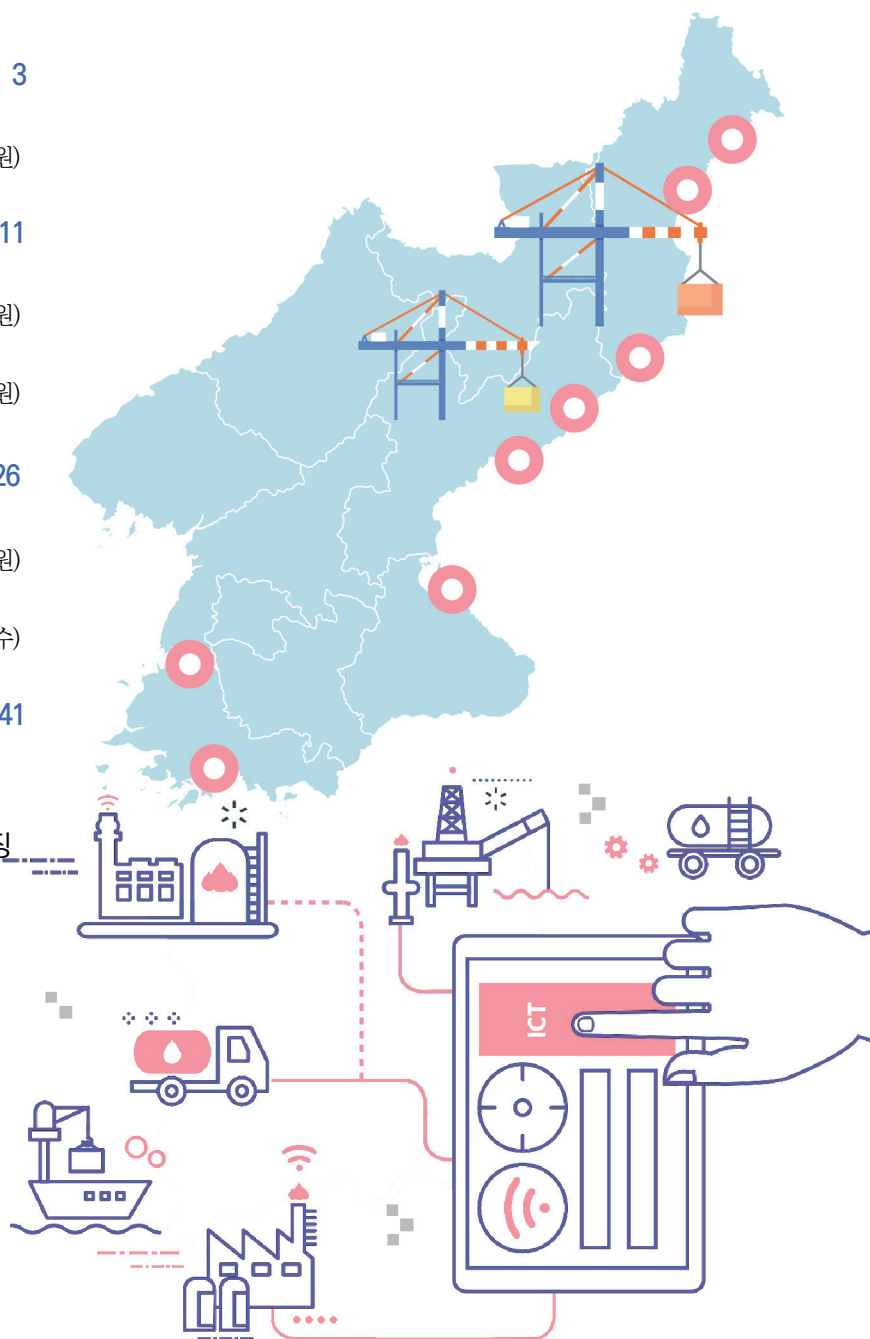
북한 소식

41

북한 언론 보도 (2025년 10~12월)

NK News 보도 (2025년 10~12월)

2019~2025년 노동신문 해양수산 분야 기사 분류 및 특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내용 및 전송 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전략연구본부 해양안보전략연구실
정다현 연구원 Tel_051-797-4747, E-mail_dhj82@kmi.re.kr

이번 호 소개

2025년 12월호 북한해양수산리뷰는 2025년 북한 해양수산 분야 이슈를 분석 및 평가하고, 2026년 전망과 정책적 함의를 짚어본다. 이를 위해 기획 칼럼 1편, 동향 분석 2편, 북한 알기 2편, 그리고 2019~2025년 노동신문 기사 통계와 북한 최근 보도를 아우르는 북한 소식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기획 칼럼에서 진희권 박사(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는 2025년 북한 수산·해양안보·해양관광 분야의 핵심 이슈를 정리하고, 2026년 이후 새로운 경제계획과 연계된 해양수산 정책 변화를 전망한다.

동향 분석에서는 윤인주 연구위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25년 개정된 북한 수산법의 주요 내용과 법·제도적 변화, 그리고 북한 수산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한다. 이어서 이승지 수석연구원(LH토지주택연구원)은 농촌 살림집 건설과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고 있는 어촌 문화주택 조성 흐름을 살피고, 락원군 바다가양식사업소·어촌문화주택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어촌 마을 재편 방향과 지역개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북한 알기에서는 이지순 연구위원(통일연구원)이 간척지 개발을 다룬 영화와 소설을 비교·분석하며, 간척사업 서사에 투영된 시대별 자연 인식과 인간상, 개발주의 담론의 변화를 조명한다. 다음으로 강채연 교수(국립통일교육원)는 ‘평원의 끝에서 만난 바다’ 신포시를 중심으로 들어 광물·조선·양식·관광이 교차하는 동해 연안 도시의 구조적 모순과 잠재력을 설명하며, 향후 남북협력 가능성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신문 및 NK News를 통해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보도된 북한의 해양·수산·해운·항만 관련 기사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아울러 북한 소식에서는 2019~2025년 노동신문의 해양수산 분야 기사를 수산업·해운항만·해양관광 등 12개 주제로 분류하고, 연도별 보도 특징을 도출하여 제시한다.

이번 12월호는 북한 수산법·제도, 지역·주거 개발, 문화·담론, 군사·제재 환경을 아우르며, 2025년 한 해 동안의 해양수산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했다. 이번 호를 통해 2026년 이후 북한 해양수산 정책과 남북 해양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기획 칼럼

2025년 북한 해양수산 분야 평가와 2026년 전망

진희권(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연수연구원)

hkjin77@gmail.com

2025년,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해를 맞아 목표 달성에 매진하면서,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지방의 산업 현대화와 생활 수준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2025년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2023년 3.1%, 2024년 3.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¹⁾ 이 같은 추세는 202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²⁾라고 규정하고 일체의 남북관계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핵무력 및 국방력 확대와 중국·러시아 간 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 북한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북한 해양수산 분야의 변화와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그 의미를 짚어본다.

1. 해양수산 분야 중심 과제는 역시, 수산업

북한 해양수산 분야의 중심은 수산업으로 중요 경제 지표에 수산물 생산량을 포함해 생산을 독려하고 있으며,³⁾ 우리나라의 ‘부’에 해당하는 ‘성’ 단위 기구인 ‘수산성’에서 수산업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신문의 보도 횟수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표 1> 노동신문 해양수산 관련 기사 분류(2021~2025)

구분	수산업	간척	해운 항만	해양관광· 친수문화	해양환경· 자원관리	연안 관리	해양 안보	기타	합계
2019	163	40	6	39	34		-	15	297
2020	76	40	14	9	26		-	21	186
2021	59	20	4	5	10	9	-	11	118
2022	84	10	1	13	18	1	3	12	142
2023	72	24	5	1	58	2	11	13	186
2024	62	20	6	17	22	2	5	16	150
2025	65	12	6	22	3	1	14	2	123

*자료: 노동신문 기사를 근거로 필자 작성

노동신문의 해양수산 분야 보도는 2019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수산업 분야 보도 감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 분야 전체 보도 중 수산업 분야 기사의 비중은 2019년(54.9%), 2020년(40.9%), 2021년(50%), 2022년(59.2%), 2023년(38.7%), 2024년(41.3%), 2025년(52.8%)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수산업 외 해양수산 관련 보도의 비중은 해마다 분야별 이슈에 따라 등락이 크며, 2025년에는 해양관광, 해양안보 분야의 비중이 예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노동신문의 해양수산 분야 기사 감소는 현재 추진 중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점 방향이 생산 설비와 인프라를 정비·보강하여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정비보강 전략’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수준의 점진적 향상에 있다는 점⁴⁾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최근 지방 산업 현대화와 생활 수준 향상 등 대규모 산업, 문화, 주거 시설 건설에 주력하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결론적으로 해양수산 분야는 경제 정책의 후순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양수산 분야 기사는 감소했으나 주목할 만한 이슈나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보도의 비중이 높았던 수산업, 해양안보, 해양관광을 중심으로 핵심 이슈를 검토하고, 그 의미를 짚어보기로 한다.

2. 수산업 분야 관심, 바다양식으로 이동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시기 초반이라 할 수 있는 2010년대 북한은 수산

기획 칼럼

업의 중점 과제를 어선어업 생산량 회복에 두었으나 최근에는 바다양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변화는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과 관련이 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조선노동당의 주도 아래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을 매년 20개 군에 건설하여 10년 이내에 북한의 모든 시·군, 다시 말해 전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비약시킨다는 내용⁵⁾으로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바다를 낀 지역은 바다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며,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발전 시범사업 창조를 지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방발전 20×10 정책 비상설추진위원회’⁶⁾ 내에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분과’가 조직되었으며, 2024년 12월에는 신포시에 ‘바다가양식사업소’가 건설되었다.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에 참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바다양식을 중심으로 수산업 구조 개선과 재건·발전을 공언하며, ‘바다가양식사업소’ 추가 건설과 해안지역 시·군에서 바다양식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바다가양식법’이 채택되었으며, 8월에는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가 준공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바다양식장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한다.⁷⁾

2025년, 북한 수산업 분야의 또 다른 특이점은 논판양어(논메기양식)를 대대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7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논판양어에서 높은 생산성과를 기록한 인민군부대 후방기지를 찾아 성과를 치하하고, 논판양어 확대를 지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문한 인민군부대 후방기지는 논 1정보(3,000평)당 메기 70t, 벼 10t을 생산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북한 언론은 물고기 70t은 논벼 200t 정도로 환산할 수 있다며, “혁명”적인 성과라고 자랑했다.⁸⁾ 이후 “전국논판양어보여주기 및 기술전습회”(8월 7~8일, 재령군 삼지강농장)가 열렸으며, 북한 전역에서 6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9월 12일에는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조선농산기술협회’와 ‘조선수산업협회’의 공동주최로 논판양어 기술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3,000여 개의 단위가 참가했다. 이와 함께 북한 전역에서 논판양어 확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평양시는 자체적으로 논판양어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하고, 50여 정보의 적지를 선정해 논을 개조했다. 강원도는 240여 정보의 논을 논판양어에 맞게 개조했으며, 평안북

기획 칼럼

도를 비롯한 10여 개 시·군은 논판양어에 필요한 치어 생산을 위한 종어장을 건설했다.

이와 같은 북한 수산업의 변화는 어선어업의 성과 부진에 대응한 생산수단 다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수산업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어자원 감소와 단조로운 생산구조 등의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으며,⁹⁾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생산수단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 2025년 8월, 준공된 ‘락원시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지구’



*자료: 노동신문, 2025.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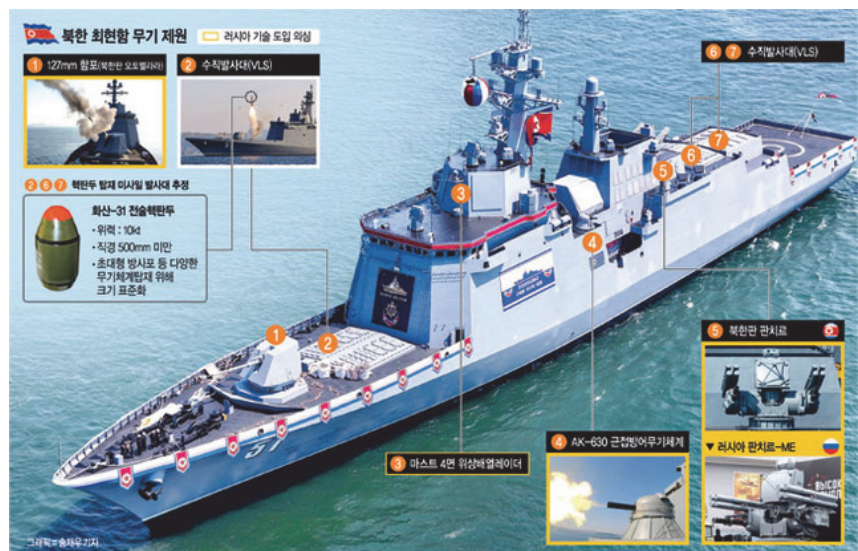
3. 새시대 함선공업혁명을 선언하며, 해군무력 강화

2025년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선박공업 발전의 새로운 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선박 건조 능력의 획기적 강화는 국가 경제발전과 주체적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 달 후 4월 25일, 남포조선소에서 5,000t급 신형다목적구축함 ‘최현’호의 진수식이 진행되었다. 진수식에 참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현’호를 새 시대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 제1호라면서 해상 주권의 철저한 수호와 선진 해양강국을 향한 노정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조선노동당의 해군 무력 강화노선에 따라 해군을 체제방위의 핵심군종, 핵전쟁 억제력의 구성 부분

기획 칼럼

으로 비상하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공언했다. 또한, 조선업의 발전은 해군 강화를 위한 관건적 임무이며, 주권사수의 전략적 과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형구축함 진수는 해군 강화의 신호탄이며, “핵동력 잠수함 건조”가 두 번째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도 선언했다. “‘최현’호는 함정 성능과 작전수행능력 평가, 통합장비운영시험 등 필요한 공정을 거쳐” 2026년 초에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에 인도될 예정이다.¹⁰⁾

<그림 2> 북한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



*자료: 문화일보, 2025.4.30.“북한판 이지스 ‘최현함’ 추적레이더·기관포, 러시아 방공무기 ‘판치르’ 복제판”, <<https://www.munhwa.com/article/11502525>>.

다음 달인 5월 21일, 신형 다목적 구축함 2호의 진수식이 청진조선소에서 진행되었으나 진수 과정에서 구축함이 균형을 잃고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당중앙위 군수공업부 부부장 이형선을 비롯해 청진조선소 기사장, 행정부장, 직장장 등이 구속되었다. 사고로 연기된 진수식은 6월 12월, 나진조선소에서 다시 진행되었다. 진수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형 다목적구축함 2호를 ‘강건’호로 명명하고, 내년부터 구축함을 매해 두 척씩 건조해 작전 수역에 배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월 18일, 다시 ‘최현’호를 찾아 ‘무장체계통합운영 시험’ 과정과 해병들의 훈련 및 생활 환경을 확인하며, “우리 해군은 가까운 앞날에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영역에서 일익을 굳건히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 칼럼

북한의 남북한 적대적 두 국가관계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완전히 차단된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 경쟁 등으로 한반도 주변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역 내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지속적 해군력 강화를 공언한 데다 해군의 핵무장까지 선언한 만큼 한반도 주변 수역의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지속적인 관찰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4.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

2025년 7월 1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개장했다(준공식은 6월 24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구상의 출발은 201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설립을 발표하고, 외자 유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2018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였다. 당시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을 최단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관광지대는 관광지구의 집합체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내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존재하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구체화하였고, 이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최초 완공 목표는 2018년 9월 9일이었으나 다섯 차례나 연기되어 결국 2025년 준공·개장하게 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각별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계속 연기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사 중단과 유엔제재 확대에 따른 공사 자재·장비 수급 문제, 경제 상황 등 내부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을 “우리식 관광업의 대표작”, “우리 국가관광업의 새시대를 알리는 서막”이자 “중대한 문화적 진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준공식에서 원산갈마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여러 지역에 대규모 관광문화지구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¹¹⁾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약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호텔 6개, 여관 37개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수욕 시설, 체육·오락 시설, 상업 및 급양

기획 칼럼

봉사 시설을 갖추고 있다. 북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장 이후 북한 전역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근로자로 연일 흥성”¹²⁾이라고 하면서 소수이지만 러시아 관광객도 방문했다고 한다.¹³⁾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시기에 들어 북한은 백두산 ‘삼지연관광지구’, ‘양덕온천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을 건설하는 등 관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외국인 관광도 2023년부터 재개했으며, ‘관광법’(2023년),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2025년) 등을 제정해 법·제도도 정비하고 있다.

북한 체제적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하지만 북한 내부 수요만으로 충분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관광업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중국·러시아 관광객 확보에 성패가 달린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남북관계 회복 등 주변 여건이 허락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관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5. 맺으며

2025년 북한 해양수산 분야를 수산업, 해양안보, 해양관광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전반적 관심 저하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서는 큰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다양식 중심의 수산업 재건, 해군력 강화와 핵무장 추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 등의 이슈는 2025년을 기점으로 가시화된 만큼, 이와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밝혔던 것처럼 2025년,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마무리 짓는다. 2026년에는 당 대회와 함께 새로운 경제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내용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의 변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부침과 관계없이 남북한은 같은 바다를 공유하고 있어 늘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접경해역에서는 언제 충돌이 발생할지 모르는 안보적 불안도 공유하고 있다.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반도 바다의 평화 정착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 남북이 머리를 맞댈 날이 올 것으로 기대

한다. 한 정치인의 말처럼 때는 도둑처럼 올지도 모르니 그날을 위해 깊은 연구는 아니라도 서로의 근황 정도는 공유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대한민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북한도 바다에서 경제적 도약의 기회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한국은행, 2025.8.29., “(보도자료) 202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 2)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한 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언급했다.
- 3) 북한은 2023~2024년 ‘인민경제 발전 12개 중요고지’를 발표하고 알곡, 전력, 석탄, 압연강재, 주택 등과 함께 수산물을 포함했다. 또한 수산업 생산량은 198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건설 10대 전망목표’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여러 경제 개발계획에 중요 지표로 포함되었다.
- 4) 최은주, “2025년 북한 경제 평가와 2026년 전망”, 세종포커스, p. 3.
- 5) 최지영,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배경과 시사점”, Online Series, CO 24-10(2024.02.202), p. 1.
-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조직,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총괄적으로 지도·통제·지원하는 지휘부라 할 수 있다.
- 7) 노동신문, 2025.8.5., “시, 군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 8) 노동신문, 2025.8.10., “당정책을 받들어 논판양어를 적극 장려하자”.
- 9)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진희권, “동향분석: 북한, 바다가양식법 제정과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북한해양수산리뷰』, 2025년 6월호 참조.
- 10) 노동신문, 2025.4.2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에서 하신 연설”.
- 11) 노동신문, 2025.6.26., “사회주의문명개화의 새 경관을 펼친 동해기슭의 관광명소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 성대히 진행”.
- 12) 노동신문, 2025.7.3., “인민의 웃음소리 끝없이 울려퍼지는 동해의 명사십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 13) 연합뉴스, 2025.8.2., “‘텃빈 해변에서 최고급 대우...’ 러 관광객 北 원산 휴가 가보니”.

동향 분석

2025년 북한 수산법 개정 분석과 시사점

윤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mouthpiece@kmi.re.kr

1. 2025년 북한 수산법 개정 개요

2025년 5월 20일 자로 북한 수산법이 수정·보충되었다. 북한 수산법은 1995년에 처음 채택된 이후 총 9번 개정되었는데, 이 중 7번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개정된 것이다. 2018~2021년을 제외하면 거의 1~2년마다 수정·보충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수산업을 유례없이 강조했던 바 있어 수산법 개정은 북한의 수산 정책과 수산업 환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이다.

국내 공개된 내용 중에는 두 차례 개정(2017년과 2024년)이 빠져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2022년 3월 15일 자 수정·보충된 수산법 이후의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2024년에 이미 수정·보충된 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다.

[표-1] 북한 수산법 수정·보충

일자	
1995.1.18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9호로 채택
1999.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호로 수정 보충
2007.5.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27호로 수정 보충
2013.2.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79호로 수정 보충
2014.3.1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17호로 수정 보충
2015.9.2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77호로 수정 보충
2017.9.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99호로 수정 보충
2022.3.1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11호로 수정 보충
2024.6.1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58호로 수정 보충
2025.5.2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21호로 수정 보충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2025.5.20. 수정 보충)

동향 분석

전체적인 구조는 제1장 수산법의 기본, 제2장 수산자원조성, 제3장 수산물 생산과 가공, 제4장 수산자원보호 등으로 동일하나 제5장 수산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가 “법적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변경되고, 제6장 부칙을 신설했다. 지도통제를 넘어 법적인 책임에 강조점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수산법을 고려할 때, 그만큼 지도통제가 되지 않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 많으므로 법적인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2. 수산법 개정 주요 내용 분석

2022년 대비 2025년 수산법에 수정 보충된 내용의 핵심은 수산자원 관리와 생산·가공의 전 과정을 중앙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산 환경·자원 관리의 통합, 수산 환경보호 정책의 과학·재정 기반 및 승인 절차 강화, 단속 불응 처벌 및 행정 제재 강화로 요약된다.

1) 중앙집중적 관리·감독 강화

제1장 수산법의 기본에 수산부문사업에 대한 지도, 수산자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가 이동 배치되고, “수산자원리용증” 발급 및 연기를 명시했다. 기존에 제5장 지도통제에 있던 지도, 감독통제 조항을 전면 이동 배치한 것이다. 수산물생산단위와 배를 빠짐없이 중앙수산지도기관에 등록하고 “수산자원리용증”을 발급하며 기일 연기는 연 1회 가능하도록 제도적 절차를 명시했다(제8조).

중앙집중적 관리·감독 강화는 다른 수정 보충 내용에도 반영되어 있다. 어장·어업허가 권한을 세분하고 경로를 변경했다. 국가적 제한어업과 자체양식장 잡수어업을 구분하고, 도(道)급 경우 절차를 ‘도인민위원회 또는 도수산지도기관’에서 ‘중앙수산지도기관’으로 조정했다(제23조). 기관명·체계 용어도 일괄 정비했다. ‘국가계획기관’을 ‘중앙계획지도기관’으로 바꾸고,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기관’ 등으로 표기 체계를 중앙집중형으로 통일했다(제27조 등). 등록·허가·출항의 3단계 절차도 명문화했다. ‘등록’(제29조)-‘리용증 발급·연기’(제8조)-‘출항 승인’(제41조)의 절차 연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동향 분석

[표-2] 북한 수산법 중앙집중적 관리·감독 강화 주요 개정 내용

조문	내용	비고
제8조	수산부문사업에 대한 지도	지도통제에 있던 지도, 감독통제 조항 이동 배치
제9조	수산자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제23조	국가적 제한어업과 자체양식장 잡수어업을 구분, 도급 경우 절차를 ‘도인민위원회 또는 도수산지도기관’에서 ‘중앙수산지도기관’으로 조정	어장·어업허가 권한 세분하고 경로 변경
제27조	‘국가계획기관’을 ‘중앙계획지도기관’으로 변경,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기관’ 등으로 표기 체계를 중앙집중형으로 통일	기관명·체계 용어 정비
제8조 제29조 제41조	‘등록’·‘리용증 발급·연기’·‘출항 승인’ 절차 연계를 명확히 규정	등록·허가·출항 3단계 절차 명문화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2025.5.20. 수정 보충) 토대로 필자 작성

2) 수산 환경·자원 관리의 통합

제2장 수산자원조성 부문의 주요 개정을 보면 수산물 생산과 수출 계획 작성, 어장분할과 어업허가, 수산물 생산량 장악을 위한 관리기관을 추가했다. 첫째, 수산물 생산과 수출 계획 작성 시 중앙국토환경보호기관에 통보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바다환경·수산자원관리와 수산물 생산계획이 연결되도록 조치했다(제22조). 둘째, 어업허가를 국가적으로 제한하는 어업허가와 자체양식장의 잡수어업허가로 구분하여, 국가적 제한 어업허가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맡되, 자체양식장의 잡수어업허가는 중앙수산지도기관이 해당 기관과 합의하도록 조치했다(제23조). 어장분할과 어업허가는 도수산지도기관 뿐 아니라 도인민위원회를 통해서도 중앙수산지도기관에 제기할 수 있게 조치했다. 셋째, 수산물 생산량을 중앙통계기관 뿐 아니라 중앙수산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통보하게 하여 수산관리기관과 바다환경관리기관이 생산량을 파악할 수 있게 조치했다(제27조).

[표-3] 북한 수산법 수산 환경·자원 관리의 통합 주요 개정 내용

조문	내용	비고
제22조	수산물 생산과 수출 계획 작성 시 중앙국토환경보호기관에 통보하도록 범위 확대	수산관리기관과 바다환경관리기관이 생산량 파악 가능
제23조	어업허가를 국가적으로 제한하는 어업허가와 자체양식장의 잡수어업허가로 구분, 자체양식장의 잡수어업허가는 중앙수산지도기관이 해당 기관과 합의	
제27조	수산물생산량을 중앙통계기관뿐 아니라 중앙수산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통보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2025.5.20. 수정 보충) 토대로 필자 작성

동향 분석

3) 수산 환경보호 정책의 과학·재정 기반 및 승인 절차 강화

제3장 수산물 생산과 가공 부문에서는 바다생태환경의 조사, 심의가 추가되고, 수산자원특별보호구관리에 승인 기관과 증서 발급이 추가되었다. 수산·국토환경기관은 조사·심의하고, 계획·과학기술·가격·재정 기관이 자금을 보장하게 한 점이 주목된다. 중앙수산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바다생태환경을 조사·심의하면서 바다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늘리는 대책을 세우게 했다(제20조). 이때 중앙수산지도기관 뿐 아니라 중앙계획지도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중앙가격지도기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게 했다.

제4장 수산자원보호에 관해서는 수산자원보호증식대책안 마련, 계획적 관리,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금지사항이 확장되고 구체화되었다. 수산자원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산계획을 체계화하고 구체적으로 승인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수산자원보호실태자료를 제출하고 수산자원생산계획을 세우는 것에 그쳤으나, 수산과학연구기관이 모든 수역에 대한 종류별 수산자원량과 생산가능량, 양어, 양식 적지를 빠짐없이 조사하고 조사자료만 아니라 “수산자원보호증식대책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심의”를 받고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송부하게 했다(제40조). 보호대상에 대한 자료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총량과 생산가능량, 생산 적지 조사를 수행하며, “과학기술심의”를 통해 비현실적인 계획이 아니라 타당한 심의를 거치게 한 것이다.

수산 환경보호 정책 집행 승인 절차를 강화했다. 첫째, 수산자원특별보호구 관리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하되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하고, 관리 분담을 받은 기관은 수산자원특별보호구관리분담증서를 발급하게 했다(제39조). 둘째, 수출 계획 승인은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서 비상설수출입심의위원회로 변경했다(제36조). 셋째, 기존에는 보호대상 수산자원의 생산을 제한하는 데 그쳤으나, 어기별로 자원량에 맞게 국가계획안에서 배차 수를 정해 수산물생산계획과 양식장, 어장, 어구이용 승인, 수산자원이용증 발급, 기일 연기 등을 확인 후 바다출항을 승인하게 했다(제42조).

이때 수산물생산계획 중 회유성물고기, 양어, 양식물은 초과 수행 금지 대

동향 분석

상에서 제외했다. 어로어업 중 오징어 같은 회유성물고기와 양식어업 전체는 초과 수행 가능하게 한 것이다.

수산자원보호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남획에 이용되는 어구가 다양해지고 감독일군의 단속과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가 많아졌을 가능성이다. 수산자원보호 금지사항에서 금지 어구가 기존 밀층뜨랄이나 트지에서 밀정뜨발, 밀정자망, 수압식잡기 등으로 구체화되었고, 금지 행위에 감독일군의 정당한 단속,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가 추가되었다(제43조).

[표-4] 북한 수산법 수산 환경보호 정책의 과학·재정 기반 강화 주요 개정 내용

조문	내용	비고
제29조	중앙수산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바다생태환경 조사, 심의 바다생태환경보호·수산자원증식 대책 수립	중앙수산지도기관 뿐 아니라 중앙계획지도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중앙가격지도기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필요한 자금 보장
제40조	수산과학연구기관이 모든 수역의 종류별 수산자원량과 생산가능량, 양어, 양식 적지 조사, “수산자원보호증식대책안”을 작성, “과학기술심의”를 받고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송부	보호대상 자료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총량과 생산가능량, 생산 적지 조사 수행, “과학기술심의”를 통해 비현실적인 계획이 아니라 타당한 심의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2025.5.20. 수정 보충) 토대로 필자 작성

[표-5] 북한 수산법 승인 절차 강화 주요 개정 내용

조문	내용
제36조	수출계획 승인은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서 비상설수출입심의위원회로 변경
제39조	수산자원특별보호구 관리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하되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 승인을 받고, 관리 분담을 받은 기관은 수산자원특별보호구관리분담증서 발급
제42조	어기별로 자원량에 맞게 국가계획안에서 배차 수를 정해 수산물생산계획과 양식장, 어장, 어구이용승인, 수산자원이용증발급, 기일연기 등 확인 후 바다출항 승인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2025.5.20. 수정 보충) 토대로 필자 작성

4) 단속 불응 처벌 및 행정 제재 강화

가장 흥미로운 수정 보충 사항은 제5장이다. 기존의 지도통제 관련 조문을 각각 제1장, 제3장, 제4장으로 이동 배치하고,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강도별로 구분한 뒤, 바다출항 중지 대상 행위를 구체화하고, 벌금 처벌은 최소 1.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상향했다.

첫째, 기존 양어장, 양식장, 자연어장 관리가 되지 않아 생산량이 늘지 않거

동향 분석

나 비법적 운영을 하거나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다른 기관에 이관 또는 정리할 수 있었던 조문이 폐지되었다(2022년 기준 제49조). 제4장에 확장·구체화된 수산자원의 계획적 관리와 생산계획 승인 방침에 따르면 이러한 비법적 운영 및 계획 미수행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지 처벌은 기존에는 벌금 처벌만 명시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경영활동을 중지·폐업시키게 하였으나, 바다출항 중지 대상을 명시하고 정상이 무거우면 해산 조치하기로 했다(제50조). 바다출항 중지 대상은 양어·양식장의 비법적 운영, 금지 어구·어법 사용, 물고기잡이 실적 등록·확인 기일 초과, 수산자원정보관리체계 도입에 지장, 양식장조사사업에 누락·불응·자료 미보장, 새끼물고기방류계획 미수행, 미승인 바다출항, 정당한 단속·조사 불응이다. 불법적 활동뿐 아니라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협조적 행위도 바다출항 중지 대상에 포함시켜 엄격한 관리를 예고했다.

셋째, 벌금 처벌은 기존 벌금에서 최소 1.5~3배, 많은 경우 5~10배까지 상향하고, 물고기잡이일지와 생산일지 같은 문건이 미비한 경우 100만원, 어구검사 없이 출항한 경우 100만원, 수산자원조성계획 미달 시 100~150만원을 신설했으며, 수산자원을 불법 수출한 경우 다른 벌금 수준에 그치지 않고 수출량의 10배 벌금을 명시했다(제51조).

넷째, 몰수 처벌은 기존 돈과 물건, 설비와 물자 몰수에 그치지 않고 수산자원 침해에 대한 손해를 변상하도록 추가했다(제52조).

다섯째, 경고, 엄중경고처벌은 고기배 또는 어구수리 미비, 위생안전성 미보장, 수산자원특별보호구 미관리, 양어수역 미관리, 미승인 낚시질 질서저해 등에 해당한다(제53조).

여섯째, 무보수노동, 노동교양처벌은 기존 처벌 대상 행위를 추가·확장했다(제54조). 부당한 조건을 내걸고 입출항을 미보장, 수산자원 및 바다생태환경조사사업에 고의적 불참 및 필요한 자금을 미보장하여 조사 방해, 어구검사 없이 출항, 단속·조사 불응하고 구타·폭행하거나 단속설비 파손을 한 경우이다. 기존의 위생 안전성뿐 아니라 수산물의 선도 미보장, 수산자원조성사업에서 검사·확인을 바로 하지 않았거나 비법적 수산물생산 목적으로 조장하여 지장을 준 경우도 포함했다. 불법 행위라기 보다는 수산물

동향 분석

생산계획에 차질을 빚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규율한다.

[표-6] 북한 수산법 단속 불응 처벌 및 행정 제재 강화 주요 개정 내용

조문	내용
폐지	양어장, 양식장, 자연어장 관리가 되지 않아 생산량이 늘지 않거나 비법적 운영을 하거나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다른 기관에 이관 또는 정리할 수 있었던 조문이 폐지
제50조	중지 처벌은 기존에는 벌금 처벌만 명시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경영활동을 중지·폐업시키게 하였으나, 바다출항 중지 대상을 명시하고 정상이 무거우면 해산 조치
제51조	벌금 처벌은 기존 벌금에서 최소 1.5~3배, 많은 경우 5~10배까지 상향하고, 물고 기잡이일지와 생산일지 같은 문건이 미비한 경우 100만원, 어구검사 없이 출항한 경우 100만원, 수산자원조성계획 미달 시 100~150만원을 신설했으며, 수산자원을 불법 수출한 경우 다른 벌금 수준에 그치지 않고 수출량의 10배 벌금을 명시
제52조	몰수 처벌은 기존 돈과 물건, 설비와 물자 몰수에 그치지 않고 수산자원 침해에 대한 손해를 변상하도록 추가
제53조	경고, 엄중경고처벌은 고기배 또는 어구수리 미비, 위생안전성 미보장, 수산자원 특별보호구 미관리, 양어수역 미관리, 미승인 낚시질 질서 저해 등
제54조	무보수노동, 노동교양처벌은 기존 처벌 대상 행위 추가·확장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2025.5.20. 수정 보충) 토대로 필자 작성

3. 수산법 개정 시사점과 정책 제언

북한 수산법 개정은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중앙집중적 관리·감독 강화이다. 행정통제의 전진 배치, 절차의 일원화, 과학·환경 기반의 보호·계획 체계 강화, 벌칙의 상향·세분화를 통해 수산자원 관리와 생산·가공의 전 과정을 중앙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개정·재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계획수립과 환경·자원 관리가 통합된 것이다. 생산·수출계획의 환경기관 통보와 보호증식대책안·계획적 관리가 신설되었다. 셋째, 환경·보호정책의 과학·재정 기반 및 승인 절차 강화이다. 바다생태환경 조사·심의에 중앙 재정·가격·과학기술 부문의 자금 보장 의무를 부과하고, 보호증식대책안 작성·심의를 신설하여 과학적 근거를 제도화했다. 넷째, 금지어구·행위의 구체화와 단속 불응 처벌 근거 명시이다. 구체 유형의 금지어구를 나열하고 ‘감독일군 단속·조사 불응’ 금지 및 이에 대한 중지·벌금·노동교양 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벌금 수준의 상향 및 행정 제재 강화도 주목된다. 벌금 상향, 몰수와 변상, 행정상 ‘중지’ 및 ‘해산’까지 가능한 단계적 체계로 강화했다.

동향 분석

이와 같은 북한 수산법 개정은 북한의 수산 정책과 수산업 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북한 당국은 2013~2016년 동안 수산물 생산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최대 생산가능량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2016년 이후 유엔 대북제재 강화와 수산물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수산물 생산 유인이 줄어든 사정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신년사는 이후 점점 수산자원 보호 및 증식 기조를 나타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은 특히 어로 활동을 통한 수산물 생산 증대가 거의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고 바다 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조성을 그 해결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화획득에 주력하기 위해 지방분권화했던 수산 생산 체계를 다시 중앙집권화하여 수산 환경·자원 관리를 통합하고 환경보호 정책의 과학·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 생산 및 자원 보호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 문헌에서는 기후, 수온, 어장 환경 변화도 우려하고 있다. 한반도 해양 생태계는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어 비단 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번 수산법 개정에서 어로 어업 중 오징어 같은 회유성 물고기와 양식 어업 전체에 대해 초과 생산이 가능하게 한 점, 남획에 이용되는 어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그 단속과 조사를 강조한 점은 한반도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남북한의 협력이 가능하고 또 필요한 대목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통일부는 2026년 업무보고에서 신(新) 평화교역 시스템을 통해 북한에 보건·기후·민생 등 제한된 분야의 물자 구매 및 제공, 남북 공동성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기후환경, 재난안전 분야 협력방안 등을 제시했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생명과 먹거리가 직결된 해양생태계와 수산업 분야의 협력 의제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 회유성 어족자원 보호와 양식 대체 적지 개발, 남획 및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대응 등에 남북한이 협력할 수요가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동향 분석

북한 어촌문화주택 건설 동향¹⁾

이승지(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sjlee268@lh.or.kr

1. 들어가며

올해 하반기 북한의 건설 및 개발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락원군 바다가양 식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지구’ 사업을 빠뜨릴 수 없다. 문화주택 건설 사업은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집중해 온 농촌살림집(주택) 건설 사업과 연결되는데, 농촌살림집 주택이 북한 농촌 개량의 핵심 사업이었던 것처럼, 어촌 문화주택 사업 역시 어촌마을 개량 사업의 한 축으로 볼 수 있다.

농촌살림집 건설 정책은 2021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5개년 경제계획과 더불어 2022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올해 2월 노동신문 기사²⁾를 통해 북한이 밝힌 농촌살림집 물량은 지난 3년간 1,500여 개 농촌마을에서 8만 700여 세대이며, 올해 건설 중인 2만여 세대 물량을 감안하면 지난 4년간 약 10만 세대 이상 농촌살림집이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살림집의 건설 수준과 내구성 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된 수백 가지 살림집 설계형과 빠른 속도의 건설, 그리고 공간적으로 전국 단위의 주택공급을 완료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에서 그간 볼 수 없었던 성과임은 분명하다.

한편, 어촌마을 개량 사업은 최근 북한의 주요 지역발전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과 더불어 해안지역 시·군의 주요 사업으로 양식사업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2024년 초부터 중앙당의 정책적 사업으로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이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데, 2024년에는 함경남도 신포시에 바다가양식사업소를 준공하면서 해안지역 시·군의 성장을 견인할 시설로 홍보하였고, 2025년 2월에는 락원군 바다가양식사업소 착공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여하여 산업시설과 더불어 살림집 조성을 통해 ‘아름다운 포구의 어촌마을 조성’을 주문했다.³⁾

지난 4년간 10만 세대의 살림집이 조성된 1,500여 개의 농촌마을은 해안을 끼고 있는 40개 이상의 시·군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농어촌

동향 분석

살림집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바다가양식사업소는 지방공업공장과 비교되며 어촌마을 개량 사업의 중심으로 홍보되고 있어, 북한의 어촌마을 문화주택은 ‘농촌주택 건설 사업’과 ‘지방발전 20×10 정책’이라는 흐름 속에서 살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간의 농촌주택 건설 현황에서의 바닷가 시·군의 살림집 현황을 살펴보고, 2025년에 완공된 ‘락원군 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지구’를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의 어촌문화주택 조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북한 농촌주택 조성 흐름과 현황

1) 북한 농촌주택 건설의 개요

북한 농촌주택 건설 사업은 농업생산량 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의 두 가지 목적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북한에서 당 정책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농촌주택 건설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당면과업’을 제시하고 농촌과 지방발전, 그리고 농촌살림집 건설에 대한 적극적 추진을 언급한 이후로 볼 수 있다. 노동신문 등 북한 내부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농업근로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하여 농촌마을을 보다 문화적으로 꾸려 문명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할 것을 강조했다.

2021년 말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2년에는 함경남도 함흥시를 포함해 총 31개 시·군에서 농촌살림집 건설 사업이 진행되었고, 2023년과 2024년에는 전체적으로 농촌살림집 건설이 추진되었다. 노동신문 등의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농촌살림집을 추계해 본 결과, 2022년에는 9,200여 세대, 2023년에는 2만 4,100여 세대, 2024년에는 4만 4,700여 세대가 완공된 것으로 나타났다.⁴⁾ 한편, 2025년 2월 노동신문 기사에는 지난 3년간 (2022~2024년) 1,500여 개 농촌마을에서 8만 700여 세대를 건설했고,⁵⁾ 현재 건설 중인 농촌살림집 규모는 약 2만 세대 수준이라고 밝혀, 4년간 북한의 농촌살림집 건설 물량은 총 10만 세대 이상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는 건설 규모가 약간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3년간 농촌살림집 건설은 매년 약 200% 수준으로 확대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향 분석

물량 증가와 함께 해가 가면서 사업 범위의 확대, 제도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하면서 북한에서 주택 건설 사업은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념과 인민 생활 향상, 농업증산, 지역균형발전의 목표에 부합하는 다차원적 정책 사업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대외 제재에도 불구하고 시멘트와 노동력 등 북한이 자체적으로 조달가능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냄으로써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전략과제’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그림 1> 농촌살림집 전경



출처: 뉴스1(2025.02.18.), “북한 ‘3년간 1500개 농촌마을에 주택 8만 700세대 건설’”(원출처: 노동신문/뉴스1)

2) 해안지역 시·군 농촌주택 조성 현황

2022년부터 본격화된 농촌주택 건설 사업은 농촌에만 적용된 것은 아니다. 해안을 접하고 있는 60여 개 시·군 중 38개의 시·군⁶⁾에서 농촌살림집이 건설되었다고 북한 언론은 공개했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 사업인 만큼 해안 시·군 지역에서도 농업생산의 현장인 농장을 중심으로 노동자 숙소 등의 농촌살림집이 새롭게 건설되었다.

2022년에는 남포특별시와 함경남북도 시·군을 중심으로 약 3,500세대, 2023년에는 황해남도 시·군을 중심으로 약 4,700세대, 2024년에는 다시 함경남북도 시·군 중심으로 약 1만 4,200세대가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⁷⁾ 이러한 해안 시·군 주택 건설 규모는 매년 전체 농촌주택 건설 규모의 약 20~25% 수준으로 실제 해안지역 인구 대비 적절한 보급 규모였는지 등은 좀 더 면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지만, 북한 전역 행정구역 개수 대비 해안 시·군 개수 비율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주택공급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동향 분석

2025년에는 전반적인 농촌주택 건설 규모 증가 수준이 이전 3개년만큼 가파른 증가세는 아닐 것으로 전망되나 농(어)촌주택 건설은 국가경제 5개년 계획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2025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2022~2024년 해안 38개 시·군 농촌살림집 건설 규모

사업연도	광역시도	규모 세대(추계 보정값 반영)
2022년	남포특별시	810
	평안북도	460
	함경남도	1,760
	함경북도	590
	황해남도	430
	황해북도	150
	소계	4,200(3,486)
2023년	남포특별시	300
	평안남도	1,150
	평안북도	470
	함경남도	910
	함경북도	1,110
	황해남도	1,600
	황해북도	150
	소계	5,690(4,723)
2024년	남포특별시	2,620
	평안남도	1,360
	평안북도	1,890
	함경남도	4,470
	함경북도	3,850
	황해남도	2,930
	소계	17,120(14,201)
합계		27,010(22,418)

3. 북한 어촌마을 개량 사업의 본보기: 신포시 및 락원군 바다가양식사업소

한편, 2024년부터 북한은 농촌마을 개량 사업에 이어 어촌마을도 마을의 자체 자원(수산물, 해양 자원 등)을 적극 활용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앞서 농촌주택 건설이 북한의 농업생산성 증대, 지역균형발전,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면서도 북한 내부의 자원을 활용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력갱생의 결정체로 활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지구 역시 해안지역 시·군 대상으로 어촌 수산자원 증대, 지역 자체 역량 활용, 인민생활 개선이라는 목표를 실현

동향 분석

하는 하나의 모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바다가양식사업소는 그간 농촌(산간) 마을 중심으로 진행된 농업발전 정책 및 농촌살림집 사업의 여촌 버전으로 볼 수 있는데, 2024년 본격 추진된 ‘지방발전 20×10 정책’과 더불어 여촌마을의 자력갱생 및 여촌 인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복합 사업으로 판단된다.

2024년 ‘지방발전 20×10 정책’과 더불어 해안지역 시·군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사업으로 함경남도 신포시에 바다가양식사업소가 건설되었다. 바다가양식사업소의 구성은 밥조개공장, 초급동실(급속 냉동고), 종합지휘실, 제품건본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산 및 양식업을 위한 생산, 가공, 판매 기능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중심으로 양식기술, 수산물 가공 등 수산업 생산량 증대와 고부가가치 사업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포시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에서는 지방공업공장과 같이 수량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포시 모델을 바탕으로 해안지역 시·군의 지방발전 거점을 지속적으로 건설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신포시 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에 이어 2025년에는 함경남도 락원군에 바다가양식사업소와 함께 여촌문화주택지구를 건설하여 지역경제 거점 시설+주거공간을 복합화하는 모델이 소개되었다.

락원군 바다가양식사업소와 여촌문화주택지구는 2025년 준공(2025.09.30.)된 사업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차례 현지 지도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농어촌 표본’이라고 강조할 만큼 중앙당에서 집중한 사업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건설 현지 지도에서 “현대성과 선진성, 독창성을 구현하는 것과 함께 바다를 낀 지역 환경에도 잘 조화되기 높은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북한 전역에서 바닷가 시·군별 양식사업소 건설 계획 작성을 선행할 것을 강조했다.⁸⁾ 신포시와 락원군 사례처럼 해안지역 시·군 지역에서는 자력갱생을 위해 바다가양식사업소를 중심으로 먹거리와 경제기반을 만들고, 주택(살림집) 건설을 통해 지역 인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락원군 바닷가양식사업소 현지지도 및 어촌문화주택지구 전경



출처: 서울평양뉴스 SPN, 2025.07.14. “김정은, 락원군 바닷가양식사업소 건설장 방문...” 전국에 양식장 대대적 건설”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219>

4. 나오며

북한은 2016년부터 미국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그리고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북한 경제 전체가 대외 경제 의존 노선에서 자력갱생을 통한 내부 생존 전략으로 전환되었고, 최소 지난 10년간 북한 정치와 경제를 떠받칠 수 있었던 주요한 전략은 지방발전 정책과 지역생산성 제고의 핵심이 된 농업발전 정책과 ‘지방발전 20×10 정책’에 의해 진행된 지방공업공장(바닷가양식사업소), 그리고 살림집(주택) 건설이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어촌(문화)주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지난 10년 이상 특별히 주목받거나 주요 정책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최근 신포시, 락원군 사례를 중심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 지도와 대대적 홍보 등의 흐름을 살펴보면, 지방발전, 농촌살림집(주택) 건설, 그리고 2024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흐름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각 지역의 자원, 특색, 지형, 지리, 인적 역량의 장점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의 강조점인 만큼, 어촌마을 역시 각 마을의 주요 (수산)자원의 특징을 활용한 정책 추진과 도시 경관 관리를 포함한 문화주택지구 조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수만 세대 건설을 완공한 농(어)촌살림집 사업 및 문화주택지구 건설의 성과는 북한 내부의 자원 및 기술 역량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건설 사업들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농촌뿐 아니라 어촌 시·군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 및 인민 생활 수준의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방공업 공장의 운영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처럼 바다가양식 사업소(어촌문화주택 포함) 역시 지속가능한 운영과 성과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신포시와 낙원군 사례가 향후 북한 어촌마을 발전과 어촌살림집 건설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이 글에서 사용된 농촌주택 현황 및 어촌문화주택 동향은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 정기 발간하는 「북한 건설·개발 동향」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발간물은 북한 관련 특수자료(노동신문, 조선신보 등)에서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였음을 밝힙니다.
- 2) 노동신문, 2025.02.18., “사회주의 농촌이 변모된다: 1. 사계절 울리는 새집들이 경사의 노래소리”
- 3) 노동신문, 2025.02.15., “락원군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착공식 성대히 진행”
- 4) 「북한 건설·개발 동향」에서 살림집 건설의 추계는 일정기간 동안 북한 매체에 실린 살림집 기사에 근거하여 살림집 건설 규모가 기사에 정확히 표현된 경우에는 해당 물량을 ‘수천 세대’, ‘수백 세대’, ‘천수백 세대’ 등을 각각 4,000세대, 400세대, 1,400세대로 가정하였다. 사업 규모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는 농촌살림집 사업의 경우 2019년~2022년 농촌살림집 사업 중 규모가 알려진 사례의 평균값을 지역별로 적용(시지역: 150세대, 군지역: 230세대)하였다. 또, 연초 혹은 연말에 공개하는 연간 완공 세대수와 실제 신문을 통해 확인한 세대수를 비교, 보정값(0.843)을 적용하여 최종 추정하였다(자세한 살림집 추정 방법은 「북한 건설·개발 동향」을 참고할 것).
- 5) 「북한 건설·개발 동향」에서 추정한 3년간의 살림집 건설 규모보다 약 2,800세대 더 많은 물량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마을과 농장 등의 실적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된다.
- 6) 노동신문 기사를 통해 공개된 농촌살림집 사업을 집계하였다. 다만, 나선특별시와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에 건설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나선특별시는 해안 시·군 지역이지만 농촌살림집이라 분류하기 어렵고, 단천시 검덕지구의 경우 2021년 이후 5개년간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된 살림집 사업으로, 일반적인 농촌살림집 특징과는 달라 농(어)촌 살림집 건설 실적에서는 제외하였다.
- 7) 노동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된 개별 농촌살림집 건설 사업에서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북한 건설·개발 동향」에서 추정하는 주택 건설 추계 보정값(0.83)을 적용하여 산정한 값이다.
- 8) 노동신문, 2025.07.14.

북한 알기

북한의 간석지 서사에 투영된 시대의 얼굴들

이지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yjs1369@kinu.or.kr

1. 들어가며

어떤 사회가 자연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해하려면, 그 사회의 국가 건설과 개발에 대한 핵심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특히 북한처럼 ‘대자연개조’를 체제적 신념으로 삼아온 곳에서는 이러한 맥락이 더욱 중요하다. 북한은 간석지 개간사업을 국토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더 많은 땅을 얻어내기 위한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으로 보았으며, 나아가 나라의 재부를 확보하는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서해의 광활한 갯벌을 막아 농토를 얻으려 했던 북한의 간척사업은 단순한 국토 확장 프로젝트를 넘어섰다. 이는 식량 증산을 위한 자연과의 투쟁이었으며 북한 체제의 위대함을 주민들에게 시각적으로 확인시키는 수단이었다.

북한의 간석지 개발 정책은 1940년대 후반부터 구상되었지만, 이 사업이 체제적인 총력 사업으로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초였다. 특히 1981년에 고질적인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만 정보 간석지 개간’이 ‘4대 자연개조사업’의 핵심 과제로 공식 결의되면서, 간석지 개간은 체제를 상징하는 최우선 과제로 자리 잡았다. 간척사업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시기에까지 중요한 정책으로 계승되었다는 사실은 ‘먹는 문제’ 해결이 여전히 북한의 뿌리 깊은 과제임을 방증한다.

북한 알기

<그림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2년에 평안북도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 보냈다는 유화 '대계도간석지의 저녁'



출처: 『로동신문』, 2023.6.8.

북한의 문학예술은 현실의 여러 면모를 단순히 미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넘어 정치적, 이념적 담론의 장으로 활용해 왔다. 간석지 건설을 배경으로 한 예술 작품들은 자연 정복을 집단적 의지의 산물로 묘사하면서, 동시에 이상적 인간상과 공동체 윤리를 매개해 왔다. 간척사업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0년대에 제작된 예술영화 <바다를 막는 사람들>(1984)은 해양 개발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인 인식을 반영한다. 이 영화는 자연개조 성공의 열쇠가 집단주의와 혁명적인 의지, 정신력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북한 체제가 지향하는 바를 투영하고 있다. 반면에 김해룡의 단편소설 <서른두 송이의 해당화>(2016)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시기에 변모된 자연에 대한 인식, 개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다의 중층적 의미가 녹아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동일한 바다가 시대, 장르, 체제적 요구에 따라 상이한 기표로 변모하는지 보여주는 지형도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세계관, 인간관, 자연관의 차이는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생긴 변화가 아니다. 영화와 소설이라는 장르적 차이, 1980년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시기라는 역사적 맥락의 차이가 서로 교차하면서 만들어낸 결과이다.

2. 스크린에 투영된 국토 확장의 욕망

조선예술영화촬영소의 <바다를 막는 사람들> (1984)은 북한이 국토 확장과 간척사업을 체제적 과제로 상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이다. 영화

북한 알기

에는 자연과 인간, 개인과 집단, 기술과 정신력 사이의 복잡한 긴장이 반영되어 있다. 영화는 광활한 갯벌에 돌성(방조제)을 쌓는 공사를 1년 앞당기자는 ‘대담한 혁신안’을 제기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그림 2> 1년 공사 단축을 혁신안으로 제기하고 바다를 측량하는 모습



출처: 예술영화 <바다를 막는 사람들>,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984.

영화의 전반부는 현장의 최고 책임자인 직장장과 노동자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직장장의 부인, 공사에 부담을 주기 싫어 신혼부부임을 숨기는 영택과 명옥, ‘자동차 돌림대’ 방식을 고안한 젊은 기술자 지섭 등 열정적인 구성원들이 개인적 욕구나 행복보다 체제적 과업을 우선하는 분위기가 가득 차 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앞당겨 성과를 내겠다는 속도전의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태풍과 해일이 돌성을 덮치며 영화는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림 3> 돌성을 쌓기 위해 고안된 전반부의 ‘자동차 돌림대’와 ‘돌주머니 공법’



출처: 예술영화 <바다를 막는 사람들>,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984.

태풍과 해일로 ‘개구(물막이 구간)’가 터지고 바닥이 20m 깊이까지 패여 나간 곳에 깊은 샘줄기가 흐른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기존의 공법으로는 복구도 불가능하고 지형적 난제를 풀 수도 없는 기술적 한계에 봉착한다. 이때 청년 영택이 돌을 거대한 쇠그물 자루에 담아 급류 속에 통째로 떨어뜨리는 ‘돌주머니 공법’을 제시한다. 폭우가 내리고 번개가 치는 악천후

북한 알기

속에서 직장장은 아내에게 부림선 키를 맡기고 영택 내외(아들 부부)와 함께 개구를 막으러 바다에 나간다.

“바다를 막자는 사람이 파도를 겁내겠나.”

“기사장, 우릴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같이 나가자고.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면 못해 낼 일이 뭐겠나!”

“막돌이 되어 굳어지는 한이 있어도 물러설 줄 모르는 그게 진짜배기 간석지 사람들이야.”

— 영화 <바다를 막는 사람들>에서 한 직장장의 말

위의 인용구는 악천후 속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나온 직장장을 반대하는 기사장 명민에게 한 직장장의 말이다. 기사장 명민은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진짜배기 간석지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깨닫게 된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힘을 합하여 자연의 횡포를 이겨내고, 돌주머니 시험 투하를 성공시킨다. 돌주머니 공법은 거센 물살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방조제를 만드는 핵심 기술이 된다. 영화에서 자연의 압도적 힘은 의지와 결단으로 극복해야 하는 도덕적 문제로 전환되고, 영화의 결말은 ‘돌주머니처럼 굳어지는’ 노동자의 신념과 의지의 승리를 상징한다. 영화는 자연을 인간의 의지로 언제나 제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북한 개발주의의 전형적 인식 구조를 반영한다.

3. 성과의 서사를 넘어선 비극

서해안 간석지 건설장을 배경으로 한 김해룡의 단편소설 <서른두 송이의 해당화>(2016)는 취재길에 오른 나(작가)에게 돌격대 중대장이었던 박철이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며 전개된다. 과거 광산에서 ‘날파도’라 불릴 정도로 거칠고 경쟁적인 기질을 지닌 박철은 간석지에 돌격대장으로 부임하여 ‘연대 1등’이라는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여 중대원들을 무리하게 독려하며 속도전식 노동을 강요한다.

북한 알기

지금은 간석지 건설장의 모든 일이 기계화되고 후방사업도 원만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때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 정말 힘겨웠습니다. 아직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몇몇 나 어린 대원들은 힘들다고 달아나고 환자들도 생겨났습니다.

— 김해룡, 단편소설 <서른두 송이의 해당화> (『조선문학』, 2016.3, p. 39)

간석지 건설장은 오로지 인간의 육체적인 힘에 의존하는 고된 작업의 연속이었음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종내 함마질을 하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뚝잡에 들고,” “기진해서 쓰러졌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정도로 간석지의 노동 강도는 극에 달했다. 박철이 경쟁에서 이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휴식 없이 몰아붙이는 돌격대식 투쟁방식을 보여주었다면, 여성으로 구성된 해당화 중대는 연약해 보이는 외형과 달리 공동체적 조화와 상호 배려를 기반으로 박철 중대를 조용히 앞서 나간다. 두 중대가 체면을 걸고 실시한 밧줄당기기에서 박철 중대가 패배하는 장면은 개인적 야심과 물리적 속도전이 공동체의 결속을 기반으로 한 집단보다 미흡함을 보여주는 서사적 전환점이다.

박철은 새벽 작업장에서 기진한 채 쓰러진 순간, 해당화 중대장 현희의 노래를 들으며 내적 변화를 맞이한다. 그는 노래를 들으며 노동의 진정한 의미는 경쟁이나 성과가 아니라, 동지애, 헌신, 정서적 연대에 있음을 깨닫고 “가슴속에 룡트림하는 불의 열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급기야 상사병에 걸린 박철은 ‘날파도’인 자신의 ‘해당화’ 처녀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게 된다. 건설장에 박철이 상사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퍼지고, 박철은 현희의 리더십을 보고 배우며 점차 변화한다.

현희는 박철의 연심 고백을 받아들이며, 사랑하려면 같아져야 한다는 것, 자기 동지들과 마음도 생각도 같이하고, 조국과 생각과 뜻도 함께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당부한다. 박철이 기존의 ‘날파도’식 리더십을 버리고 인간적 윤리에 기반한 새로운 지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사회주의적 인간형이 외적 규율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도덕적 성숙을 통해 자발적으로 내면화될 수 있음을 서사적으로 보여준다.

북한 알기

<그림 4> 간석지 건설자들을 형상한 유화 ‘인민사수전’(2021)



출처: 『조선예술』, 2022.1, p. 38.

그러나 소설의 결말은 북한 문학예술의 해피엔딩 공식을 깬다. 박철이 더 성장하기 위해 금성정치대학으로 가고, 해당화 처녀가 제대하는 날에 비극이 닥친다. 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두 처녀를 구출하려다 현희가 희생되고 만다. 현희의 고귀한 마음은 중대원 서른두 명이 손수건에 해당화 꽃수로 새기고, 그것은 박철에게 마음의 잣대로 남게 된다.

결과론적으로 간석지 건설은 성공리에 마무리되지만, 현희에게 닥친 비극적 사건은 개발 현장의 긴장과 위험이 결코 정신력만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체제적 담론에 조심스럽게 균열을 내며,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고귀하더라도 자연의 예측 불가능한 힘 앞에서는 한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작품은 승리와 성과 이면에 놓인 인간의 삶과 사랑, 비극적 상실이 얹혀 있는 복합적 현실을 문학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4. 바다를 가로지르는 간석지 서사의 변화

영화 〈바다를 막는 사람들〉과 소설 〈서른두 송이의 해당화〉는 간석지 건설 현장을 배경으로 하지만,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간형의 구성 방식, 개발주의 담론의 재현 전략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두 작품의 자연관은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영화는 자연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며, 자연의 위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집단의 사상적·정신적 역량을 강조한다. 태풍과 해일은 방조제 건설을 지연시키

북한 알기

는 물리적 장애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고 정신력을 증명하는 기능적 장치로 변환된다. 이러한 서술은 자연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하는 개발주의적 관점을 전면화하는 것이다. 반면에 소설은 자연을 인간의 삶과 감정을 둘러싼 배경적 질서로 제시하면서도, 결말부에서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 존재감을 과시한다. 폭풍으로 인한 비극은 자연이 인간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실재임을 보여준다. 이는 소설이 자연을 정복과 경외의 이중적 대상으로 제시함으로써 영화보다 넓은 인식의 층위를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두 작품은 ‘이상적 인간형’을 구성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영화는 개인의 감정과 욕망을 억제하고 체제적 과업에 헌신하는 인간형을 이상적 모델로 제시하며 집단주의를 옹호한다. 반면에 소설은 인간의 감정과 관계적 윤리를 중심으로 인물의 성장 과정을 서술한다. 박철은 초기에는 경쟁과 속도전에 집착하는 자기중심적 지도자였으나, 해당화 처녀를 통해 공동체적 배려와 도덕적 감수성을 내면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영화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감성적 차원의 서사를 형성한다.

셋째, 개발주의 서사의 구성 전략도 상이하다. 영화는 간석지 건설의 성공을 전면에 내세우며 환경 파괴나 노동 강도와 같은 문제를 철저히 배제한다. 개발 과정은 체제적 영광과 노동자의 헌신이라는 틀 속에서 강화된다. 반면에 소설은 개발의 긍정성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결말의 비극을 통해 개발주의적 낙관주의에 균열을 가한다. 폭풍으로 인한 죽음은 자연의 비가시적 힘과 인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처럼 영화와 소설은 간석지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자연, 인간, 개발의 문제를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재현한다. 영화가 승리 서사를 구축하며 자연과 인간을 도구화한다면, 소설은 건설의 성공을 말하면서도 인간의 의지와 돌격 정신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거대한 힘을 드러낸다. 바다를 정복하여 국토를 확장한다는 당의 노선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소설 속 바다는 인간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운명과 시련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여운을 남긴다.

5. 나가며

1980년대에 제작된 영화 <바다를 막는 사람들>은 집단적 단결과 자연 정복의 이상을 전면에 내세운 하나의 ‘시각적 레짐(visual regime)’으로 기능한다. 영화에서 자연은 파도와 갯벌이라는 물리적 형상을 지닌 채 등장하지만, 결국 인간의 의지력과 혁명적 열정으로 극복 가능한 대상으로 축소된다. 자연의 위협은 통제 불가능한 실재라기보다 집단의 사상성과 정신력을 시험하는 장치로 변환되며, 정복의 논리는 시각적 장엄함 속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시기에 발표된 소설 <서른두 송이의 해당화>에서 바다는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방향을 바꾸는 존재로 제시된다. 또한, 북한 문학예술에서 보기 드문 비극적 희생은 개발의 당위성 이면에 놓인 불안과 취약성을 드러낸다.

두 작품 모두 갯벌 생태계의 훼손과 어업 기반의 붕괴 등 개발주의가 야기하는 구조적, 환경적 문제를 외면한 공통의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두 작품은 모두 자연의 반격과 그로 인한 희생, 개발주의 담론에 잠재된 위험을 잠정적으로 가시화한다. 이는 북한의 문학예술이 단순히 이념을 반복 재생산하는 도구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적·윤리적 성찰의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보여준다. 30여 년의 시간적 간극을 지닌 두 작품은 자연 정복을 통한 체제 건설의 빛나는 서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고통과 희생, 상실의 흔적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비추고 있다. 이는 북한 사회가 직면한 현실적 한계와 예술이 포착한 진실을 이중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 알기

평원의 끝에서 만난 바다: 신포시의 역설

강채연(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kchy163@korea.kr

1. 들어가며

신포시는 함경남도 동해안의 작은 항만도시다. 면적 43km², 인구 약 15만 명 남짓한 이 소도시에서 흥미로운 역설이 시작된다. 신포의 지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은 마치 ‘평원의 끝’을 상징하는 지점처럼 보인다. 북쪽으로는 산악지대가 병풍처럼 둘러서 있으며 전체 면적의 60%가 산림으로 덮여 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지형은 점차 낮아지다가 마침내 평탄해진다.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바다, 검푸른 바다의 세계가 펼쳐진다.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평원은 생명의 터전이다. 그러나 신포시는 무성한 산악지대와 협소한 평야라는 조건 때문에 결국 바다에 의존해야만 했다는 첫 번째 역설을 안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신포시는 역사적으로 북한 수산업을 대표하는 도시로 자리 잡아왔다.

2024년, 신포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미래 부자도시’ 설계 속에서 북한 해안도시 발전전략의 대표적 시범도시로 주목받았다. 실제로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포시 지방발전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바다를 접한 시·군에서 해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시범창조사업’을 당 중앙이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추진 중인 <지방발전 20×10 정책> 속에서 신포가 해양도시와 해양산업 모델의 첫 시험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신포시를 말할 때, ‘전략적 심층 거점’이라는 두 번째 역설을 빼놓을 수 없다. 마양도 일대에는 북한의 최대급 잠수함 기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핵전략 잠수함 및 미사일 시험과 연관된 공간이기도 하다. 이처럼 한 도시 안에서 지방발전정책과 국방 전략공간이 공존하는 구조는, 신포가 ‘같은 공간, 다른 시간’을 품은 도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병존은 한반도 현실이 만들어낸 필연적 공존 관계를 드러낸다. 그리고 둘 다 체제의 집중 투자대상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어느 쪽이 진짜 신포시의 이미자인가? 이 질문은 남북 해양협력이 마주하는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다.

북한 알기

이 글은 신포라는 작은 해양도시에 응축된 이 역설을 풀어가면서, 그 안에서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해양협력의 미래를 모색한다.

2. 신포 해양도시 특징: 이중 메커니즘

신포시는 지리적·전략적으로 북한에서 가장 흥미로운 해양도시다. 먼저 지리적 측면에서 보면, 해양경제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다. 신포시 남쪽 2.5km 해상에 위치한 마양도(면적 약 8km²)는 신포항 전면을 가로막아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한다. 이 섬 덕분에 신포항은 외해의 거친 파도를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항만 개발비용의 대폭 절감은 물론 항만운영의 효율성까지 갖추고 있다. 주변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수역으로 인해 명태나 가자미, 임연수어, 대구, 낙지, 청어, 정어리, 고등어 등 다양한 어종이 분포한다.¹⁾ 잔잔한 파도가 특징인 신포만의 해저 백사는 명태 산란장으로 적합해 동해안의 대표적 명태 어장으로 알려져 왔다.

마양도에는 현재 북한의 해군 4전대가 주둔하며 최대 규모의 잠수함 기지가 자리하고 있다. 공기부양정이나 잠수함, 수상함 등 각종 해군전력이 배치되어 있고, 대공포·해안포·지하 시설 등 방공시설도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다. 또한 신포조선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에 들어 전략잠수함 개발과 연관해 여러 차례 주목을 받았다.²⁾ 2023년 이후로는 꾸준히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CM)이 시험 발사되기도 하고, 그에 따른 신행 핵잠수함 개발 사례들이 꾸준히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처럼 신포에서는 양식·수산업이라는 경제 논리와 잠수함·미사일 전력이라는 군사 논리가 상반된 방향으로 작동한다. 두 층위는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이면서도, 전략적으로는 분리된 구조를 이루며 수직적 역설을 드러낸다. 즉 표면에서는 비군사적 해양산업의 발전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북한의 전략체제 담론을 떠받치는 핵심 물리력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목해야 할 지점은 해양경제로서의 신포의 잠재력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포는 평야 부족이라는 지리적 약점을 오히려 해양경제의 집중이라는 필연성으로 전환한 도시다. 바로 자연항과 풍부한 수산자원이라는 우월성은 북한이 신포를 양식업의 거점으로 선정하게 만든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다.

북한 알기

한편, 신포는 동해안의 중부에 위치해 있어 평균기온이 온화하면서도 강수량이 많아 연중 수산 생산량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해안선은 도서와 만(灣)이 발달해 있고, 내만지역과 바다호수, 작은 섬들이 산재해 있어 양식장 조성에 매우 유리하다. 또 근해의 깊은 바다와 인접해 있어 바닷물 순환이나 산소공급, 해류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양식어종의 생존율도 높다. 북한은 이러한 조건들을 기반으로 대규모 바닷가양식사업소를 준공하고 시범 운영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사업소는 첨단 가공시설들과 종자배양 설비를 갖추고 여러 어류, 패류, 해조류의 양식을 종합적으로 생산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범 전략이 정착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포시가 기존 어업 중심에서 벗어나 연중 안정적인 해양양식의 생산적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식량·단백질 자급률 개선이 가능해질 수 있다. 둘째, 해산물 가공·저장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지역 고용 확대, 수출 잠재력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 셋째, 내륙 경지면적의 부족을 해양 활용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산업 다변화와 주민생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넷째, 신포의 양식중심 모델은 락원군·리원군 등 주변 해안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3. 어항(漁港)을 넘어 ‘종합 항만’으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포항의 역할 변화도 주목된다. 신포시는 동해 어장들과 연계된 대표적인 수산도시이자, 지리적으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까지 연결되는 물류 거점이다. 신포수산사업소는 대형 어선들과 운반선, 중소형 선박과 양식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만·부두·가공시설·철도 수송체계를 모두 갖춘 종합적인 수산 기지다. 또한 신포수산대학도 이곳에 자리해 있어 전문인력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신포시가 당·정부 차원의 해양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항만의 물류체계와 기능 측면에서도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한다. 이는 최근 남한의 포항항이 철강 중심에서 2차전지 물류로 전략적 기능을 확장한 사례와도 비교될 수 있다. 즉 점진적으로 신포항의 ‘종합 항만화’ 가능성을 전망하게 하는 대목이다.

물론 이러한 전망에 대한 바람은 아직 제한적이다. 현재의 기술 및 인프라 구조에서는 거의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제 차원의 대규모 투자

북한 알기

와 그에 따른 양식사업의 성공적 확장이 이루어진다면, 항만 현대화는 연쇄적으로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양식물의 대량수송을 위한 냉동 및 수송 부두의 확충이라든가 가공·포장시설의 확대, 해외 수출을 위한 대형선박이나 접안시설 구축 등이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실포조선소는 단순한 선박 건조를 넘어 북한 해양산업의 기술적 거점이라는 점에서 양식사업의 성공에 중요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조선산업과 연계된 기술 인프라의 상호관계, 그로부터 발생하는 순기능과 역할에 관한 문제로 다시 연결된다.

이 중 몇 가지 가능성을 다시 연결해 보자. 우선 공유 가능한 기술 기반으로 △해양 환경 모니터링 기술(수질, 수온, 염분 측정), △자동화 및 기계화 기술(양식장 관리), △정보 통신 기술(IoT, 센서 네트워크), 금속가공 및 용접 기술(건축) 등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전문인력의 활용과 그에 따른 순기능의 문제다. 조선소의 고급 기술인력들은 양식산업의 현대화를 주도하거나 혹은 참여·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집단적 동원 체제의 경우에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크다. 이럴 경우, 해양 환경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조함자(操艦者)들의 기술은 양식업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사례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양식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해양 기술이 다시 조선 기술의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이른바 두 산업 간의 상호관계와 순기능이다. 이는 실포시에도 해양산업의 통합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는 미래의 잠재력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실포항의 미래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달라질 수 있다. 첫째, 양식 생산물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항만중심의 물류가 확대될 가능성이다. 실제로 양식된 수산물 및 가공품들은 국내 소비와 대외무역을 위해 실포항을 경유하게 될 것이다. 둘째, 조선산업 관련 자재나 부품의 수송 증가 가능성이다. 실제로 실포조선소의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물자들과 완성된 선박의 선적은 실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함경남도 광물자원의 운송 거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다. 이는 함경남도 지역의 광물자원 수출이나 수입물자 교환이 가능한 배후지역으로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남한의 ‘북방 물류 구상’이 연결되면 실포항의 위상은 더욱 상승할 수 있다.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의 수산물 수출이나 중국 본토로의 광물 수입, 나아가 동북아 지역 물류허브로서의 역할 등이 기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방면적인 측면에서 실포항은 단순히 실포시를 대표하는 어장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종합 항만으로서의 구조적, 기능적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는 것이다.

북한 알기

4. 남북 해양협력: 공동 이익과 점점 찾기

신포를 중심으로 남북 해양협력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군사적 민감성이다. 그러나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군사적 영역과 완전히 무관하게 협력이 가능한 ‘최소 분야, 최소 단위’들이 분명 존재한다. 신포는 이러한 최소 단위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포시가 위치한 사실상의 이중 구조는 협력의 제약인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협력을 기획할 수 있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신포시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 해양협력의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

최근 주변국(중국,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항만(점) 중심의 교통망(선)과 배후지(면 또는 선·면)에 대한 경제적 네트워크 및 성장 전략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항만을 생산·물류·가공·연구기능이 결합된 복합 허브로 전환하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³⁾ 이는 해양도시 발전에 있어 매우 실용적인 모델을 제공한다. 해양 클러스터와 해양도시의 다양한 성장요인들이 국가 경제전략의 중심 의제로 부상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해양중심의 산업 다변화는 단순한 수산업이 아니라 제조업과 물류, 디지털 기술, 에너지 산업 등까지 포괄하는 미래전략으로, 남북 모두에게도 직결되는 분야다. 뿐만 아니라 각국이 ‘항만(점)-연결 교통망(선)-배후지 경제권(면)’의 구조가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매우 적극적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조는 사실 군사적 민감성을 배제하고서라도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틀로, 남북협력 방향성에 주는 시사점도 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신포시에 대한 체제적 시범사업의 추진은 북한식 해양도시의 ‘점-선-면 전략’으로 해석될 충분한 여지가 있다. 최근 북한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별 맞춤형 산업모델을 적용하고 있는데, 신포시는 그중 ‘해양형 모델’로 규정된 것이다. 전략적 측면에서 이는, 주변국 혹은 글로벌 해양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학습된 북한식 접근으로 볼 수도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비슷한 자연지리 조건을 갖춘 해안 도시들을 ‘점’으로 설정하고, 배후 네트워크(선)를 구축해 전 지역(면)으로 확장한다는 장기 플랜으로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확장 전략을 통해, 실제로 동해안 전체를 하나의 연속적인 경제권으로 묶어내고자 할 경우, 남북 해양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포시를 대상으로 하는 남북 해양협력의 현실적 가능성과 실용적인 대안은 현재

북한 알기

신포시가 위치한 ‘점-선-면’의 구조 속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점(Point) 측면에서는 전략적 해양도시로서의 신포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바닷가양식사업소는 단순한 수산정책이 아니라, 신포를 해양경제 실험도시로 전환하는 핵심 기제로 기능한다. 가능한 시기가 도래한다면, 여기에 남북이 기후환경 데이터나 수산 질병관리 기술, 양식 스마트화를 위한 기초기술 등의 공유를 고민해 볼 수 있다. 또한 가공·저장·기술 인력 양성 등 배후 산업이 결합한다면 신포는 동해안 해양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 여기에 남북 간 인력교류나 온라인 기반의 기술교육도 가능해진다면, 신포시는 새로운 해양인재 육성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 둘째, 선(Line) 측면에서는 배후지 연계를 통한 물류 네트워크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여 매칭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신포항에 남한의 포항항이나 동해항 등과 연계한 해상 물류 흐름이 추가된다면, 신포는 남북 교역의 핵심 항만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다. 이러한 축은 향후 북·중·러 물류 축을 연결할 수도 있다. 셋째, 면(Plane) 측면에서는 동해 해양경제권의 확장 모델로서 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신포시의 성공은 단천·김책·청진·나선 등 북부 해안 도시로 자연스럽게 확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각 도시가 갖는 서로 다른 기능, 즉 양식류·가공체계·물류·연구 등을 분담하는 형태의 북한식 해양 산업 분업 체계 구상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남한의 동해안 항만도시 발전 경험은 북한에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결합이 동반된다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동해의 공동경제권이라는 새로운 기반이 형성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동해 전체를 남북·북중러에 걸친 ‘동북아 해양경제권’으로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신포시는 북한의 해안도시들 가운데서도 가장 독특한 이중 구조를 품고 있다. 산악지형과 좁은 평야 속에서 바다로 향하는 생존의 기반을 마련했고, 조경수역과 천연 방파제의 역할을 하는 마양도와 깊고 안정적인 항만 구조는 신포가 해양도시로 자리 잡게 한 기반이었다. 북한이 신포시를 대표적인 양식업의 시범도시로 지정한 것은 단순한 산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해양도시 발전전략의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왜냐하면, 신포시 모델이

북한 알기

정착될 경우 원산은 물론 단천, 김책, 청진, 나선 등 동해안 중심의 해양벨트 형성에 유리한 시범적·구조적·기술적 사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신포의 진정한 독특함은 지형이나 신규 산업구조보다 더 깊은 층위에 있다. 해양경제와 군사전략이 공존하는 역설적 생태계가 그것이다. 양식사업과 조선·수산기지는 경제적 자립을 향한 미래공간이지만, 핵 잠수함 전략은 북한 체제 전략의 지속성을 상징한다. 이러한 이중 전략 속에서 신포시는 북한의 해양정책을 읽어내는 가장 입체적인 창이자 한반도 해양정치를 조망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가공·조선·물류가 연결된 복합적인 해양산업의 구조, 친환경 항만운영과 해양생태 보호를 결합한 지속가능한 도시가 구축된다면 참으로 이상적인 해양도시가 될 수 있다. 또한 남북 해양교류 거점으로의 잠재력이자 곧 신포시를 기존의 수산 도시에서 진정한 해양도시 전략으로 변화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양식, 데이터 기반 관리, 자동화 기술까지 적용된다면 신포는 동해 북부의 기술집약적 해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결국 신포는 북한 해양도시의 미래를 보여주는 프롤로그다. 바다를 통해 자립 기반을 확장하고 도시 간 연계를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동북아 해양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지점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신포를 바라본다는 것은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바다를 조직하고 활용하려 하는지를 읽어내는 일이다. 끝으로 평원의 끝에서 만난 바다, 그곳에서 신포 주민의 삶을 넘어 한반도 해양 미래의 지형을 그려낼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신정호, “북한 해양전략의 변화에 따른 한국 해군의 전략적 대응방향,” 『해양안보논총』, 제41호(2019), 페이지 미상, 참고.
- 2) 〈조선일보〉, 2019.10.13.
- 3) Hien Thi Dieu Vo, Ho Phi Dinh, and Quyet Xuan Nguyen, “Hinterland development to enhance hinterland connectivity and boost seaport competitiveness in Ho Chi Minh City,”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Vol. 23(2025), pp. 55-66; Shulin Wan, Weixin Laun, “Hinterland evolution and port growth decomposition: The case of Shanghai,”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Vol. 100(2022), pp. 38-53 참고.

북한 소식 (10~12월)

북한 해양·수산 기사 (2025년 10월~12월)

진희권(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연수연구원)

hkjin77@gmail.com

<2025년 10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로동신문	10월 23일	배수송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	- 황해북도 송림시, ‘송림해운사업소’, 매달 수송과제 초과 완수 - 선박의 ‘머무름시간’(정박시간)을 줄이고 많은 골재를 수송
민주조선	10월 24일	년간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	- ‘평안남도수산물관리국’, 연간 ‘물고기잡이계획’ 완수 - ‘한천수산물사업소’는 연간 ‘물고기잡이계획’을 2배 이상 달 성했으며, ‘문덕수산물사업소’, ‘문덕태항수산물사업소’, ‘평원 수산물사업소’, ‘가마포수산물사업소’도 높은 실적을 기록
조선 중앙통신	10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 해상대지상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은 10월 28일 조선 서해 해상에서 ‘해상대지상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진행 - “함상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은 수직발사되며 서 해해상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800여s간 비행하여 표 적을 소멸”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 회 비서 박정천은 시험 발사를 참관하고 구축함 ‘최현’호와 ‘강건’호의 “함운용훈련 및 무기체계강습실태”를 파악
로동신문	10월 31일	당의 양어정책관철에서 이룩된 소중한 결실	- ‘평양메기공장’, 지난 10년간 생산계획을 완수하여 인민들 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기여

<2025년 11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로동신문	11월 3일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에서 10월 인민경제계획 완수	- 해양수산 관련 내용 발췌 - ‘수산성’ 10월 계획 완수. ‘평안북도수산물관리국’, ‘평안남도 수산물관리국’, ‘황해남도수산물관리국’, ‘남포수산물사업소’에서 연간 물고기잡이 계획 완수
로동신문	11월 6일	올해 논판양어를 적극 내밀어 많은 덕을 본 농장들의 현실을 놓고	- 논판양어를 받아들이면 지력을 높이고 병해충피해를 줄여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높은 소출을 거둘 수 있으며, 물고기 성장에 필요한 생태환경과 먹이 보장에도 유리 - 올해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골남새농장’, 논판양어 포전에서 종전보다 정보당 3t 이상의 논벼를 수확
조선 중앙통신	11월 11일	온포근로자휴양소 신설공사와 염분진해안공원지구 건설 추진	- 함경북도에서 ‘온포근로자휴양소’ 신설 공사와 ‘염분진해안공원지구건설’ 마감 단계에서 추진
로동신문	11월 12일	동해명승의 눈부신 전변과 더불어 길이 빛날 화폭	-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사진전람회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솟아난 동해기슭의 황홀한 별천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성황리 진행
민주조선	11월 28일	단천항 지상건설 준공식 진행	- 김정은 위원장은 ‘단천지구광업총국’의 광산, 공장, 기업소에 필요한 생산원료, 연료와 제품을 보관·관리하는 ‘화물 중계사업소’ 조직과 단천항 지상건설을 지시
민주조선	11월 29일	평양해운사업소 평천려객역사 준공	- 대동강 기슭에 ‘평양해운사업소 평천려객역사’ 준공 - ‘평천려객역사’는 여객선을 이용해 평양 ‘5월1일 경기장과 송림시 방향으로 유람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도모

<2025년 12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로동신문	12월 5일	새로 건설된 청진물놀이장 준공식 진행	- 12월 4일,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청진물놀이장’ 준공식 진행
로동신문	12월 5일	논판양어를 확대도입하기 위한 준비사업 적극 추진	- 평양시에서는 만경대구역에 종어시설을 조성하고 논판양어장 ‘보여주기사업’ 진행. 50여 정보의 논판양어 적지선정 - 함경북도 내 10여 개 시·군에 종어기지 건설 - 강원도는 논판양어를 위해 240여 정보의 논을 개조
조선 중앙통신	12월 6일	신포시바다가 양식사업소에서 준공 후 첫 밥조개 수확 시작	-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준공 후 첫 밥조개(가리비) 수확 - 생산주기가 6개월이라 “일명 속성밥조개라 부르는 민밥조개”를 11월 23일부터 수확
	12월 7일	각지 수산단위들에서 연간 고기배무이계획 완수	- 수산성과 해당 단위에서 연간 배무이(선박건조) 계획 완수 - ‘운전수산사업소’에서 <황금해>계열의 고깃배와 운반선 건조 - ‘문덕수산사업소’와 ‘가마포수산사업소’도 배무이 계획 완수
로동신문	12월 11일	논판양어를 위한 종어기지들이 일떠섰다	- 평안북도 운산군, 룡천군, 동림군 등 여러 시·군에 논판양어를 위한 종어기지 건설 추진
로동신문	12월 14일	정장어종어장이 새로 일떠섰다	- 함경남도 장진군에 ‘정장어종어장’ 건설
조선 중앙통신	12월 19일	구미포수산사업소에 해양배양장이 새로 일떠섰다	- 함경북도 ‘구미포수산사업소’에 현대적인 해삼배양장 건설 - 새로 건설된 해삼배양장은 종합조종실, 여과실, 원종배양 및 실험실, 먹이배양실 등 새끼해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과학연구 조건을 갖추고 있음
로동신문	12월 22일	토지정리돌격대에서 지난 5년간 3만 3500여 정보의 토지 정리	-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3만 3500여 정보의 토지가 ‘기계화포전’, ‘규격포전’으로 정리되고 수천 정보의 ‘간석지내 부망공사’ 진행, 논농사를 보다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튼튼한 토대 구축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로동신문	12월 25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핵동령전략유도탄잠수함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 김정은 위원장 8,700t급 ‘핵동령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안전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며”,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수 없는 핵무력구성으로 국가의 영구적인 평화환경과 절대적안전을 보장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결심은 불변”이라고 강조 - 김정은 위원장은 “함선건조부문이 당의 새 세기 해군무력 건설로선을 높이 받들고 혁혁한 생산성과를 이룩”했다고 치하하며, “핵전쟁억제력의 중대한 구성부분으로 될 핵전략공격잠수함”은 불후의 업적이라고 언급 -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함개발계획은 조선반도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발언 - 김정은 위원장은 “해군과 그 전략적구성요소를 지속적으로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다양한 수상 및 수중함선들의 건조속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한편 규모를 확대해나가며 여기에 각이한 공격무기체계들을 부단히 결합시켜나갈 것”이라고 언급 -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 개발하고 있는 “수중비밀병기”의 연구사업 실태도 파악하고 해군무력 개편과 새로운 부대창설 관련 내용도 지시
조선중앙통신	12월 26일	기상수문국 서해해양연구소에서 가치있는 해양과학연구성과 이룩	- ‘서해해양연구소’는 해양예보의 과학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보장하고 조선 서해의 ‘해양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기초연구과제를 수행했으며, 간석지건설을 확대할 수 있는 해양연구자료 구축과 응용프로그램을 개발 도입 - 또한, 서해갯문 하류 수역의 퇴적상태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를 완성했으며, 서해갯문의 정상운영과 주변 해양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방안 수립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 해양재해를 정확히 예측하고 해양활동을 과학화하며 해양 생태환경 보호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사업과 부표 관측을 과학화하기 위한 기초적 문제를 해결 - 서해 ‘바다가양식장’ 수역의 해양예보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연구와 조류전력 및 해상풍력 자원량 평가를 위한 연구 등 해양과학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12월 29일	우리 식의 밥조개종자생산기술 확립	- ‘원산수산대학’과 ‘수산연구원’에서 새로운 밥조개 종자 생산 기술 연구·완성 - 새로 개발된 밥조개 종자 생산 기술을 ‘신포시바다가양식 사업소’에 도입해 본 결과, 모든 기술지표를 만족. 새로 개발된 기술은 원가를 낮추면서 밥조개 종자 생산량을 확대

북한 소식
(10~12월)

NK News 북한 해운·항만 기사

정다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dhj82@kmi.re.kr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10월 2일	Russian cargo ship visits North Korea weapons port for first time in 2 months	-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제재를 받은 러시아 선박 Lady R이 약 두 달 만에 북한 나선향 재입항한 것으로 Planet Labs 위성영상을 통해 확인됨 - Lady R은 9월 24~26일 러시아 보스토치니항에서 나선향으로 이동해 컨테이너를 하역했으며, 이번 입항을 계기로 컨테이너를 재선적할 것으로 예상됨 - Lady R은 미국의 해운 부문 제재 대상 선사 MG-Flot 소속으로, 2023년 10월 북-러 무기 운송을 처음 포착했으며, 2024년 4월에는 한국 정부 제재 대상에도 포함됨 - 8월 초 이후 나선향 부두에서 추가 하역·선적 활동이 거의 관측되지 않아, 해상 경로를 통한 무기 운송은 약 두 달간 일시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큼 - 해상 운송이 잠시 줄었더라도, 러시아가 전쟁 지속 의지를 보이고 있어 종전까지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큼
11월 12일	Canadian arctic patrol ship monitors North Korea smuggling for 2nd time in month	- 캐나다 해군 초계함 HMCS Max Bernays가 11월 초, 일본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 간 환적(ship-to-ship transfer) 감시 임무를 수행하였음 - 이번 임무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른 대북 해상 제재 이행의 일환으로, 일본 외무성은 자국의 감시 활동 및 정보 공유와 연계된 국제 공조 사례로 평가하고 있음 - Max Bernays는 2018년 이후 대북 해상 제재 감시 임무에 14번째 투입되었으며, 9월 중·하순에도 북한 선박 환적 감시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및 캐나다 공군 CP-140 장거리 초계기와 연계된 작전을 수행한 바 있음 - 캐나다는 ‘네온작전(Operation NEON)’을 통해 항공기·함정을 주기적으로 파견하고 있으며, 수집 정보는 과거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및 현재의 다자 제재 모니터링 팀에 보고되고 있음 - 북한은 석탄·석유 등 금수·상한 품목에 대한 제재를 미국 주도의 자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이와 같은 해상 감시 임무와 제재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음
11월 27일	French ship has 'interaction' with Chinese navy while surveilling North Korea	- 프랑스 해군 프리깃함 Prairial은 10월 말 서해에서 대북 선박 간 환적(ship-to-ship transfer) 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중국 해군 함정과 ‘상호 작용(interaction)’ 했으며, 프랑스 국방부는 이를 “전문적이고 통제된(professional and controlled)” 대응이었다고 설명함 - 중국 해군 함정이 제재 감시 임무 중인 Prairial을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프랑스 측은 이 과정에서 남북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의 밀집도를 관찰함 - Prairial함의 이번 임무는 2021년 이후 네 번째로 수행된 정례 대북 제재 감시 작전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북한의 석탄·석유 밀수 등 제재 위반 환적 행위를 감시하는 데 목적을 둠 - 중국은 대북 제재 감시 활동에 대해 자국 영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비판하고 있으며, 프랑스 해군 함대에 대해서도 남중국해·대만해협 통과 시 ‘중국 영해 불법 진입’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전례가 있음 - 특히 Prairial함은 작년 대만해협을 통과한 이력이 있어 중국 해군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대북 제재 감시 임무 중 이뤄진 양측 함정 간 ‘상호 작용’은 중국이 자국 주변 대북 제재 감시 활동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11월 27일	Russian ships linked to North Korean arms trade ramp up visits to DPRK	- 위성영상 분석에 따르면 대북 무기 밀수에 연루된 러시아 선박 Lady R와 Angara가 10월 두 차례, 11월 세 차례 나선항에 입항하는 등, 8월 이후 주춤했던 북한-러시아 해상 군수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port	협력이 재가동된 정황이 확인됨 - Lady R과 Angara는 모두 미국의 대러 제재 대상 선박으로, 2023년 중반부터 나선향을 거점으로 북한발 군수 물자를 러시아로 운송함 - 11월 22일 위성영상에서는 Lady R와 유사한 선체 규모의 선박이 나선향에 입항한 뒤, 부두에 적재되어 있던 컨테이너가 사라진 모습이 관측되어 러시아 측의 군수 화물 픽업 가능성이 제기됨 - 우크라이나 군 정보당국은 2023년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 규모를 약 650만 발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음 - 최근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 전투 및 지뢰 제거 작전에 북한군 병력 수천 명을 투입한 것으로 보도되는 등, 군수 물자 공급을 넘어 병력 파병까지 확대되고 있음
12월 9일	7 Chinese ships 'shadowed' New Zealand vessel tracking North Korean smuggling	- 뉴질랜드 국방군(NZDF)에 따르면, 뉴질랜드 해군 군수지원함 HMNZS Aotearoa가 2025년 11월 서해 인근 국제수역에서 북한의 해상 밀수(환적)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중국 해군 함정 7척이 이를 '추적(shadowing)'했다고 밝혔음 - Aotearoa와 헬기 SH-2G(I) Seasprite는 임무 기간 중 '불법 가능성이 있는' 선박 간 환적 2건을 중단시키고, 관심 선박 7척을 식별했으며, 상선 49척에 호출, 억지 메시지 79건을 발신함 - 북한은 석유·석탄 등 유엔 제재 상한선을 초과하는 물자를 확보·반출하기 위해 불법 선박 간 환적을 지속해 왔음 - 최근에는 제재 대상 선박을 활용해 러시아에 무기·병력을 지원한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가운데, 뉴질랜드를 비롯한 다국적 해군의 제재 감시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
12월 17일	UK warship carries out North Korean sanctions monitoring mission near Japan	- 국제해사기구(IMO)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회원국감사(IMSAS)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여, 해운 운영 및 이행·집행 실태를 점검함 - IMO는 북한 해사국과 면담하고 여러 현장을 방문했다고만 밝혔으며, 구체적인 방문 장소나 감사 결과, 체류 기간은 공개하지 않음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IMO를 해운·물류 분야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소수 국제기구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어, 정치적 개방보다는 ‘실익 중심의 선택적 협력’ 차원에서 이번 감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함 - 임 교수는 최근 북한이 선박을 추가 확보하는 등 상업 해운 활동을 확대해 왔으며, 이에 따라 민간 해운 활동에 대한 일정 수준의 국제적 인정과 운항 안전·보호를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함 - 동시에, 북한은 제재 환경 속에서도 제재 대상 유조선이 중국 해역에서 위치 정보를 공개하며 운항하는 등 제재 이행의 ‘허점’을 시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러시아의 느슨한 제재 집행에 힘입어 불법 유류·화물 운송을 보다 대담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IMO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제한적 협력이라도 해상 안전(safety)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북한 역시 실질적 이익이 기대되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향후에도 선별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제기됨

북한 소식 (2019~2025)

2019~2025년 노동신문 해양수산 분야 기사 분류 및 특징

구분	어선어업		양어·양식			유통·가공	간척		해운항만	해양관광·친수문화	해양환경·자원관리	연안관리	기타		합계
2019	44		92			27	40		6	39	34		15		297
2020	13		56			7	40		14	9	26		21		186
2021	19		36			4	20		4	5	10	9	11		118
구분	수산업	어선어업	양어양식			유통가공	수산자원	간척	해운항만	해양관광친수문화	해양환경	연안관리	해양안보	기타	합계
			해면	내수면	공통										
2022.1.	-	-	-	1	-	1	1	-	-	3	2	-	-	-	8
2022.2.	1	3	-	-	-	-	1	-	-	2	1	-	-	-	8
2022.3.	-	1	-	2	-	1	-	1	-	1	1	-	-	3	10
2022.4.	1	2	-	2	-	-	-	1	-	2	2	1	-	1	12
2022.5.	-	1	3	1	-	-	-	-	-	-	-	-	-	-	5
2022.6.	-	-	1	1	-	-	-	-	-	-	-	-	1	-	3
2022.7.	-	-	-	4	-	1	-	-	-	-	1	-	-	-	6
2022.8.	-	2	-	5	-	2	-	1	-	1	3	-	2	1	17
2022.9.	-	7	3	3	-	2	1	1	-	-	3	-	-	1	21
2022.10.	-	1	4	3	-	-	-	1	-	3	1	-	-	3	16
2022.11.	1	5	3	1	-	1	-	3	1	-	2	-	-	3	20
2022.12.	-	2	4	3	1	-	1	2	-	1	2	-	-	-	16
2022년	3	24	18	26	1	8	4	10	1	13	18	1	3	12	142
2023.1.	-	3	2	1	-	1	-	1	1	-	-	-	-	-	9
2023.2.	-	1	1	2	-	-	-	-	-	-	2	-	-	1	7
2023.3.	1	4	1	-	-	-	-	2	-	-	2	-	1	2	13
2023.4.	-	1	-	5	-	1	-	4	1	-	1	-	1	1	15
2023.5.	-	2	3	2	-	-	1	3	-	-	4	1	1	-	17
2023.6.	-	-	1	2	-	-	1	2	-	-	10	-	-	3	19
구분	수산업	어선어업	양어양식			유통가공	수산자원	간척	해운항만	해양관광친수문화	해양환경	연안관리	해양안보	기타	합계
			해면	내수면	공통										
2023.7.	1	1	1	1	2	1	-	2	-	-	13	-	1	3	26
2023.8.	-	4	2	2	-	1	-	1	1	1	9	-	4	-	25
2023.9.	-	-	-	2	-	-	-	2	-	-	4	-	3	-	11
2023.10.	-	4	-	2	1	-	-	4	1	-	3	-	-	3	18
2023.11.	-	1	-	-	-	4	-	2	-	-	4	1	-	-	12
2023.12.	-	1	1	4	-	-	-	1	1	-	6	-	-	-	14
2023년	2	22	12	23	3	8	2	24	5	1	58	2	11	13	186
2024.1.	1	-	-	-	-	1	-	3	-	1	2	-	1	1	10
2024.2.	-	1	1	1	-	-	-	2	2	-	2	-	1	-	10
2024.3.	1	1	5	-	-	1	-	3	-	-	1	-	-	3	15
2024.4.	-	1	2	2	-	-	-	1	-	3	1	-	2	-	12
2024.5.	-	3	4	1	-	-	-	1	-	-	5	-	-	1	15
2024.6.	-	-	3	-	-	-	1	1	1	3	4	1	-	3	17

구분	수산업	어선 어업	양어양식			유통 가공	수산 자원	간척	해운 항만	해양관광 친수문화	해양환경	연안 관리	해양 안보	기타	합계
			해면	내수면	공통										
2024.7.	1	1	2	-	-	1	-	1	1	3	3	-	-	4	17
2024.8.	-	-	2	1	-	-	-	2	1	1	2	-	1	1	11
2024.9.	-	2	4	1	-	-	-	2	-	2	1	-	-	-	12
2024.10.	-	1	2	1	-	-	-	-	-	2	-	-	-	1	7
2024.11.	-	1	3	1	-	2	-	1	-	1	1	-	-	2	12
2024.12.	1	1	2	1	-	1	-	3	1	1	-	1	-	-	12
2024년	4	12	30	9	-	6	1	20	6	17	22	2	5	16	150
2025.1.	-	-	5	-	-	-	-	3	-	-	-	-	-	-	8
2025.2.	-	-	4	-	-	-	-	3	-	-	-	-	-	-	7
2025.3.	-	3	3	1	-	-	-	1	1	-	-	-	-	-	9
2025.4.	-	-	2	1	-	-	-	1	1	-	-	-	4	-	9
2025.5.	-	2	3	-	-	-	-	-	1	-	-	-	4	1	11
2025.6.	-	-	1	3	-	-	-	1	-	2	-	-	2	-	9
2025.7.	2	-	4	2	-	-	-	1	2	12	-	-	2	-	25
2025.8.	-	1	5	6	-	1	-	1	-	5	1	-	1	1	22
2025.9.	-	-	7	4	-	-	-	1	-	2	-	-	-	-	14
2025.10.	-	1	-	2	-	-	-	1	1	-	-	-	-	-	5
2025.11.	-	1	-	1	-	-	-	-	-	1	2	-	1	-	6
2025.12.	-	-	-	3	-	-	-	1	-	2	1	-	2	1	10
2025년	2	8	34	23	-	1	-	14	6	24	4	-	16	3	133

※ 분류 항목 변화

- 수산업: 수산업 여러 부분의 내용이 한 기사에 언급된 경우
- 양어양식: 최근 해면양식 기사 증가, 해면양식과 내수면으로 분류
- 해양안보: 최근 해군 무력, 함선 건조 등의 기사가 종종 등장,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 기사 제목에 해양관련 내용 포함되거나, 내용 중 해양과 관련 내용이 상당한 경우, 해양수산 관련 기사로 채택

□ 2022년 보도 특징

- 2022년 상반기 어선어업 기사는 모두 과거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등 어선어업 분야 기사는 현재 생산 관련 기사의 비중이 낮음(10% 수준)
- 해양관광 관련 기사 - 대다수 해양관광지 소개 기사
- 해양환경 관련 기사는 대다수 지구온난화, 미세플라스틱 등에 대한 세계적 동향과 해외 사례, 2022년 10월부터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비난 기사 간헐적 게재

□ 2023년 보도 특징

- 2023년 6-8월 해양환경 기사 중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관련 보도의 비중이 높았으며(6월 5건, 7월 7건, 8월 7건), 해양환경 오염, 온난화 등의 보도도 증가
- 8월 해양안보 관련 기사는 모두 해군절(8월 28일) 관련 보도

□ 2024년 보도 특징

- 해양관광 관련 기사: 대다수 천연기념물 소개(천연기념물 중 바다연관 천연기념물), 2023년부터 비정기적으로 천연기념물 소개
- 어선어업 기사 대폭 감소, 생산과 직접 관련된 보도는 거의 없음(통천수산사업소 개건 현대화[12월] 외 의미 있는 생산 관련 기사 없음)

□ 2025년 보도 특징

- ‘지방발전 20×10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 12월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완공 이후 바다양식 중심의 수산업 정책 본격화
- 김정은 위원장의 인민군 부대 후방기지 방문(7월) 이후 논판양어 기사 급증
- 해군력 강화 노선에 따라 구축함 ‘최현’호(4월), ‘강건’호(6월) 진수와 김정은 위원장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 방문 등 해양안보 관련 보도 증가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7월)을 비롯해 남포시 서해갑문 해수욕장 개건 및 물놀이장 증설, 청진시 물놀이장 개장 등 해양관광 관련 기사 증가